

[서식 예] 인수금청구의 소(전부금 채무인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인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합명회사●●건설(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외 ◎◎◎가 받을 공사대금 ○○○만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타기○○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20○○. ○. ○○. 소외 합명회사●●건설(제3채

무자)에게 위 명령정본을 송달하고, 20○○. ○○. ○○. 위 전부금의 지
요구하였습니다.

2.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뒤 건설교통부장
관의 인가를 얻어 소외 합명회사●●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을 양수함과 동시
에 같은 소외 합명회사●●건설의 건설업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고서,
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인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인수된 위 전부금의 변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
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인수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이 소외 합명회사●●건설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2. 갑 제2호증 | 위 명령송달증명원 |
| 3. 갑 제3호증 | 건설업 양도양수인가서 사본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임(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 부터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